

'잠재성장률 2%p 제고'를 위한

경제주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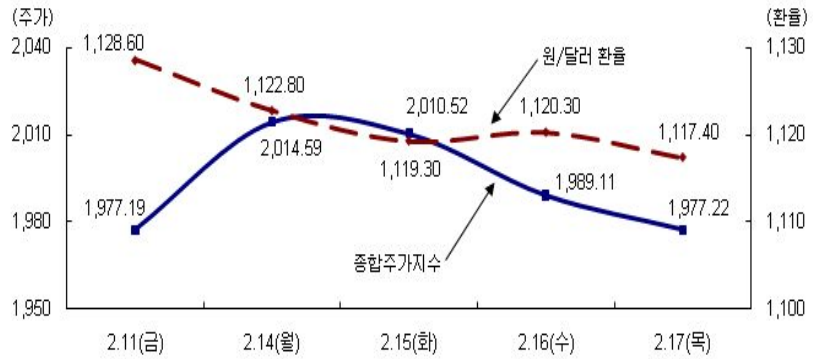
HRI Weekly Economic Review



MB정부 후반기 정책방향 및 과제

週間 主要 經濟 指標 (2.11~2.17)

Better than
the Best!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1
□ MB정부 후반기 정책방향 및 과제	1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12

□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연구본부 : 유 병 규 경제연구본부장 (2072-6210, bkyoo@hri.co.kr)
 : 김 동 열 수석 연구 위원 (2072-6213, dykim@hri.co.kr)

Executive Summary

□ MB정부 후반기 정책방향 및 과제

■ 기로에 선 한국경제

2010년 실질GDP 증가율이 6.1%를 기록하고 1인당 국민소득이 다시 2만 달러를 달성하는 등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를 성공적으로 극복함에 따라, 2011년은 향후 한국경제가 성장잠재력을 회복하여 지속 성장의 길로 접어드느냐 아니면 일시적 경기회복 후 다시 침체를 반복하는 불안정 성장을 하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

■ MB정부 3년의 성과와 한계

(4대 양적 지표) 2008년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MB정부의 4대 양적 경제지표들은 대체로 양호한 수준이다. MB정부의 지난 3년간 평균성장률은 2.8%에 불과하지만, 경상수지는 연평균 214억 달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5%, 실업률은 3.5%로서 참여정부 및 DJ정부와 비슷하거나 좋은 편이다.

(4대 질적 지표) 그러나, 현대경제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 일자리 창출 부진 등으로 응답자의 89%가 아직 경기회복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으며, 규제완화 등 親기업환경 조성도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또한, 성장잠재력과 재정건전성, 소득분배, 지정학적 리스크 등 4가지 질적 지표는 향후 개선의 여지가 남아 있다.

성장잠재력: 저출산-고령화 심화, 외국인 투자 부진, 사회적 자본 미흡 등으로 성장잠재력이 하락 추세에 있으며, 2011년 이후 잠재성장률은 3%대로 낮아질 전망이다.

재정건전성: 국가채무가 2010년 400조원으로 3년전보다 100조원 이상 증가했고, 국가채무비율은 GDP의 35%로서 3년전보다 4%p 급등하는 등 재정건전성이 악화되었다.

소득분배: 지니계수는 2010년 0.319(도시, 시장소득)로서 소득분배가 악화되고,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과 생산성이 하락하여 대기업과의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

지정학적 리스크: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피격 등으로 남북 긴장은 최고조에 달했으며, HRI 평화지수는 2009년 3/4분기이후 2010년 4/4분기까지 하락 추세에 있다.

■ 집권 후반기 경제정책 과제

(기본 방향) 정책추진력이 약화되는 집권 4년차 신드롬에 유의하면서 선택과 집중의 전략을 구사해야 하며, 경제대통령으로서의 평가를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 親기업환경 조성, 성장잠재력 제고 등 3가지 과제에 집중해야 한다.

(세부 과제) 첫째, 일자리 창출을 통한 내수기반 확충이다. 청년, 여성, 고령자 등 상대적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확대는 체감경기 회복과 내수기반 확충에 기여할 것이다. 둘째, 親기업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서비스업의 진입규제 완화,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공기업 민영화 등 시장을 키우고 경쟁을 활성화하는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 셋째, 성장잠재력의 제고다. 부품소재산업의 선진화, 인적 자본의 확충, 저출산 대책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등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2%p 제고해야 한다.

1. 기로에 선 한국경제

○ (성공적 위기극복) 한국경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2010년 실질GDP 증가율 6.1%를 기록하고 1인당 국민소득이 다시 2만 달러를 달성하는 등 위기극복에 성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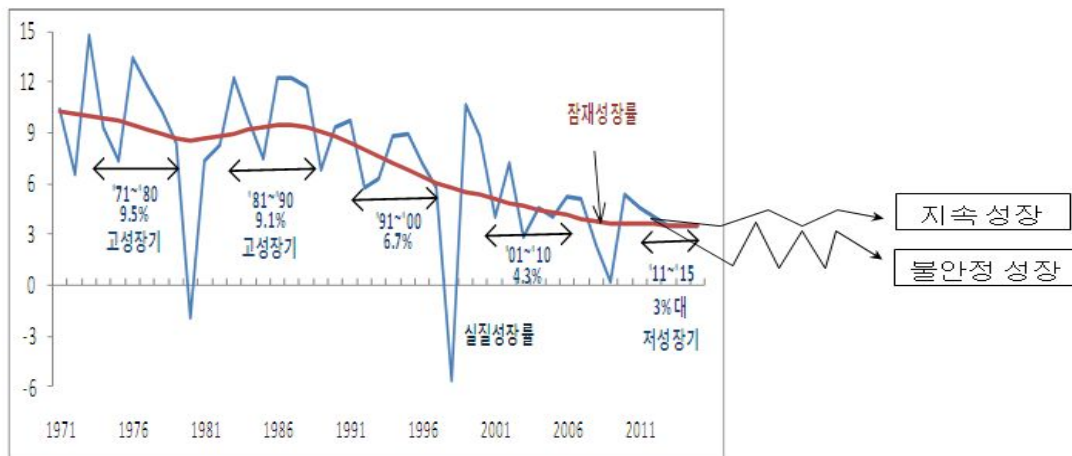
- 글로벌 금융위기로 2009년 경제성장률이 0.2%를 기록하기도 했으나 2010년 6.1%로 급반등하여 충격에서 일찍 벗어났으며, 2007년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에 도달한 이후 2년 연속 뒷걸음쳤으나 2010년 다시 2만 달러를 기록

○ (위기극복 이후의 진로) 2011년은 위기극복 이후 한국경제가 성장잠재력을 회복하고 지속 성장의 길로 접어드느냐, 아니면 일시적 경기회복 이후 재차 침체의 늪으로 빠져드느냐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

- **지속 성장:** 성장잠재력을 회복하고 내외수 균형을 통해 위기에 강한 경제체질로 전환한다면, 향후 5% 내외의 꾸준한 성장을 지속할 것임

- **불안정 성장:** 성장잠재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외부충격에 취약한 체질을 유지한다면, 향후에도 침체와 반등을 반복하는 불안정 성장을 기록할 것임

< 지속성장의 기로에 선 한국경제 >



자료: 한국은행, 현대경제연구원.
 주: 1) 잠재성장률은 단순추세법(H-P 필터링)을 이용.
 2) ↔는 잠재성장률의 구간 평균치임.

2. MB정부 3년의 성과와 한계

○ (4대 양적 지표) 세계경제를 침체의 늪으로 떨어뜨린 글로벌 금융위기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MB정부의 양적 지표들은 우수한 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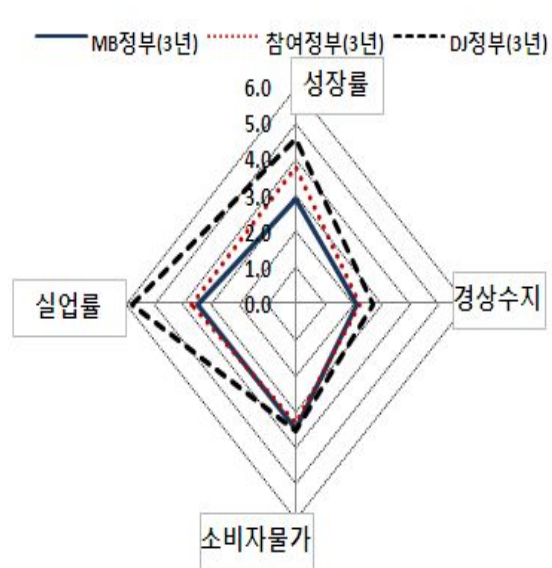
-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지난 3년간 평균 성장률이 2.8%에 불과하지만 OECD 회원국들에 비하면 높은 편이며, 경상수지와 소비자물가, 실업률 등 다른 경제지표들은 과거 정부에 비해 우수한 성과를 거둠
 - 성장률: 참여정부 4.3%, DJ정부 4.8%의 평균성장률보다는 낮지만, 향후 2년간 5% 성장을 한다면 MB정부의 평균 성장률도 3.7%내외로 높아질 전망
 - 경상수지: 연평균 214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여 DJ정부 초기의 273억 달러에는 못 미치지만, 참여정부 초기의 222억 달러와는 비슷한 수준임
 - 물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연평균 3.5%로서 참여정부에 비해서는 다소 높지만, 외환위기로 고생했던 DJ정부와 같은 수준임
 - 실업률: 실업률은 연평균 3.5%로서 참여정부와 비슷하지만, 외환위기로 고생했던 DJ정부의 5년 평균 실업률 4.9%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임

<취임 이후 3년의 주요 경제지표>
(단위: %, 억 달러, 달러 만 명)

		MB정부 (3년)	참여정부		DJ정부	
			3년	5년	3년	5년
4대 양적 지표	경제 성장률	2.8	3.8	4.3	4.3	4.8
	경상수지	214	222	205	273	196
	소비자물가	3.5	3.3	2.9	3.5	3.5
	실업률	3.5	3.7	3.5	5.8	4.9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주: 연 평균.

<취임 이후 3년의 경제성과 비교>
(단위: %, 100억 달러)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주: 3년 평균이며, 경상수지 단위는 100억 달러

○ (기타 양적 지표) 4대 양적 지표를 보완하는 1인당 GDP, 실질실효환율지수, 주가지수, 취업자 등의 성과도 대체로 양호한 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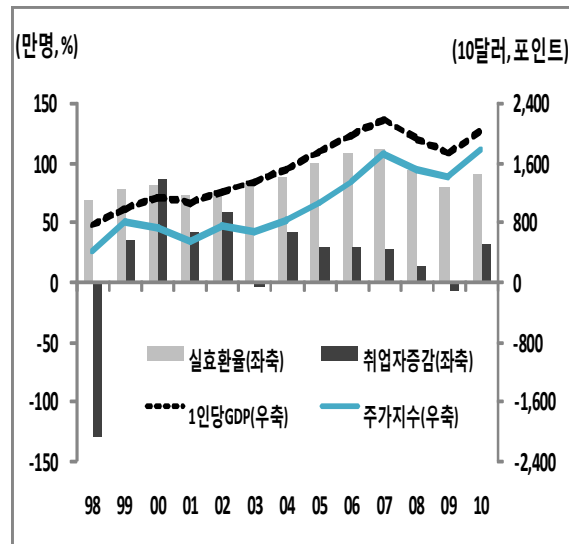
- 1인당 국민소득은 2008년, 2009년 2년 연속 하락했으나, 2010년 다시 2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주가지수는 2010년 말 2천 포인트를 넘어섰고, 2010년 취업자 증가는 전년대비 32.3만 명에 달해 주요 경기지표는 호조를 보임
- 국민소득: 1인당 GDP는 2007년 처음 21,653 달러를 기록한 이후 금융위기의 여파로 2년 연속 하락했으나, 2010년 말 다시 20,165 달러를 달성함
- 실질실효환율: 원화의 실질실효환율은 MB정부 3년 평균 81.3으로서 금융위기에 따라 참여정부에 비해 절하되었으나, 2010년이후 절상 추세¹⁾에 있음
- 주가지수: 금융위기로 급락했던 주가지수가 2010년 초부터 회복하기 시작하여 작년 말 2천 포인트를 넘어섬으로써 향후 체감경기 회복에 기여할 전망
- 취업자: 2010년도의 취업자 증가는 전년대비 32.3만 명에 달했으며, 3년 평균 13.2만 명을 기록. 외환위기를 겪은 DJ정부 3년간 -1.9만 명보다는 양호한 편이지만, 2010년도에 취업애로계층은 증가하고 청년 취업자는 감소했음

<기타 경제지표 비교>
(단위: %, 억 달러, 달러, 만 명)

기타 경제 지표		MB정부 (3년)		참여정부		DJ정부	
		3년	5년	3년	5년	3년	5년
1인당 GDP		20,165	17,551	21,653	11,347	12,094	
실효환율		81.3	92.6	98.1	80.8	82.6	
생산자 물가		4.1	3.5	3.1	4.0	2.3	
주가지수		1,574	862	1,130	647	655	
취업자 증감		13.2	22.9	25.3	-1.9	19.1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IMF, BIS
 주: 1인당 GDP는 기말 기준이며, 나머지는 기간 평균. 실효환율은 BIS(broad, 실질)기준이며 기간 평균.

<기타 경제지표 추이>
(단위: %, 10달러, 만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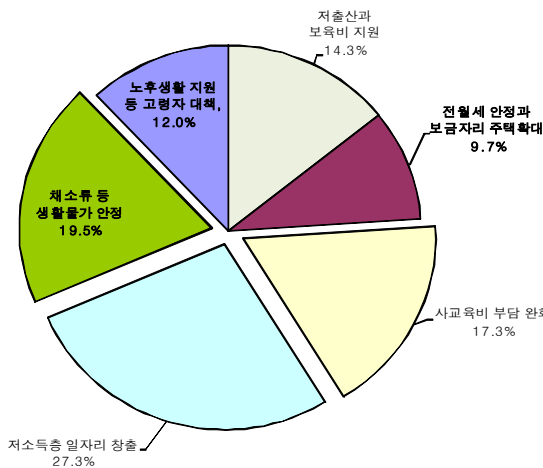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IMF, BIS
 주: 1인당 GDP는 10달러, 기말 기준이며, 나머지 3개 지표는 연평균. 실효환율은 BIS, 실질, 기간평균, 달러=100 기준.

1) 달러(=100)대비 원화의 실질실효환율은 2010년 12월 92.9로서 향후 7%내외의 추가 절상 여력이 남아 있음

○ (체감경기 및 질적 지표) 2010년 말 현재 각종 경기지표는 크게 호전되었음에 비해 아직 국민들의 체감경기는 부진하며, 성장잠재력, 재정건전성, 소득분배, 지정학적 리스크 등 질적 지표는 개선의 여지가 많음

- (체감경기 부진) 2010년말 기준 경제지표의 급속한 개선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의 약 89%가 실질적인 경기회복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²⁾
 - 그 원인은 일자리 창출의 미흡, 고용 및 소득 불안, 부동산 등 자산가치의 하락³⁾, 가계부채 증가, 생활물가 불안⁴⁾, 사교육비 부담 등으로 추정
 - 취업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취업애로계층⁵⁾은 2009년, 2010년 연속 증가하여 192만 1,101명을 기록하는 등 체감 고용상황은 여전히 어려움
- (규제완화 미흡) 취업 초 규제완화 등 親기업환경 조성을 기치로 내걸었으나, 의료·교육서비스 관련 규제완화 미흡으로 체감 만족도는 높지 않음
 - 규제 최소화, 공기업 민영화, 영리병원 허용,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등을 통해 '비즈니스 프렌들리' 환경을 만들겠다는 공약의 진척이 미흡⁶⁾함
 - 우리나라의 경제적 자유도는 '00년 54위에서 2008년 37위로 많이 개선⁷⁾되었으나 노동시장의 유연성, 노사관계 안정화, 의료 교육 법률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분야의 규제완화 등에서 개선의 여지가 많음

<2011년 친서민 정책의 우선 순위>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제7회 경제적 행복지수, 2011.1.20

< 국가별 경제적 자유도 비교 >

	2000년	2005년	2008년
영국	8.25 (6위)	8.10 (5위)	7.81 (10위)
대만	7.28 (26위)	7.68 (15위)	7.48 (22위)
독일	7.50 (15위)	7.65 (18위)	7.46 (24위)
일본	7.43 (17위)	7.54 (22위)	7.46 (24위)
한국	6.58 (54위)	7.28 (38위)	7.28 (37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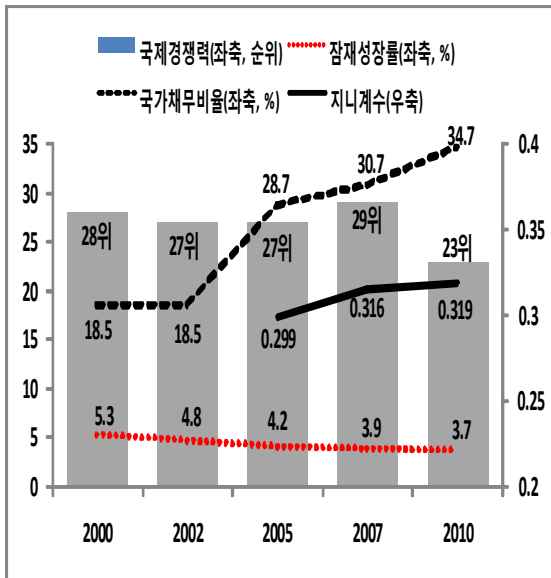
자료: Fraser Institute(2010)

2) 현대경제연구원, '제7회 경제적 행복지수', 2011.1.20
 3) 현대경제연구원, '가계 재무구조 악화의 특징과 시사점', 2011.2.11
 4) 최근 식품 및 생활 물가지수 추이는 별첨 3 참조
 5) 현대경제연구원, '취업애로계층의 급증과 해소방안', 2011.1.21
 6) 한국경제신문, MB정부 3년 정책평가, 2011.2.14
 7) Fraser Institute, 『Economic Freedom of the World』, 2010

○(4대 질적 지표) 지난 3년 동안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G20 서울 정상회의 등 성과도 적지 않았으나, 성장잠재력, 재정건전성, 소득분배, 지정학적 리스크 등 4가지 질적 지표는 향후 개선의 여지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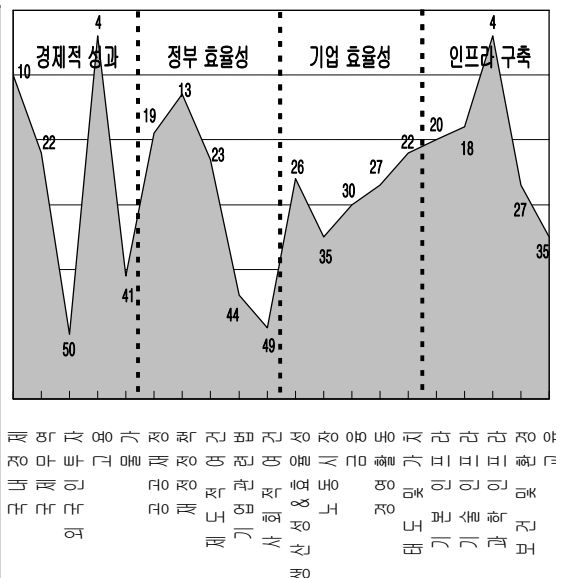
- (1)성장잠재력, (2)재정건전성, (3)소득분배, (4)지정학적 리스크 등 4가지 질적 지표와 관련한 숙제들이 남아 있음
 - 성장잠재력: 新성장산업의 부진, 저출산 심화, 외국인투자 부진, 기업관련 법률과 사회적 여건의 미흡 등⁸⁾으로 잠재성장률은 계속 하락 추세에 있음
 - 재정건전성: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국가채무의 GDP비율이 2007년 30.7%에서 2010년 34.7%로 4%p 높아졌으며, 재정적자가 GDP대비 4.1%를 기록하는 등 재정건전성이 악화되어 향후 균형재정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 소득분배: 지니계수(도시, 시장소득 기준)가 2010년 0.319로 악화 추세에 있으며, 중소기업의 이익률은 하락하고 대기업대비 생산성은 하락⁹⁾하고 있음
 - 지정학적 리스크: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피격 등으로 남북 긴장이 고조되었으며,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평화지수 조사 결과도 하락¹⁰⁾하고 있음

< 주요 질적 지표의 변화 추이 >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IMD
 주: 지니계수는 도시 가구, 시장소득 기준

<국가경쟁력 구성요소별 순위>



자료: IMD(국제경영개발원), '국가경쟁력보고서', 2010
 주: 외국인투자, 기업관련 법, 사회적 여건 등이 취약

8) IMD가 발표한 국가경쟁력 구성요소별 순위를 보면, 특히 외국인투자, 기업관련 법, 사회적 여건 등이 취약함
 9) 중소기업청 및 중소기업중앙회 자료 (별첨 2 참조)
 10) 현대경제연구원이 분기별로 조사·발표하는 HRI 한반도 평화지수의 추이에 따르면, 2009년 3/4분기 협력과 대립의 공존상태(40.2)에서 2010년 4/4분기 긴장고조상태(25.0)로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음

3. 집권 후반기 경제정책 과제

- 1) 기본 방향: 일자리 창출, 親기업환경 조성, 성장잠재력 제고 3가지에 집중
- (4년차 신드롬 유의) 집권 4년차에 성과주의와 초조함에 떠밀려 성급하게 정책을 추진한다면 오히려 실패 가능성이 높아지게 됨
 - YS정부 사례: 집권 후반기의 레임덕을 우려한 나머지 국회 반대에도 불구하고 1996년 12월 26일 노동법을 전격 통과시킴으로써 오히려 레임덕을 앞당김
 - (선택과 집중) 집권 4년차에 정책 추진력이 약화되는 현상을 감안한다면, 다음 3가지 국정과제에 '선택과 집중'하는 전략을 구사함
 - 일자리 창출: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인식 하에 그동안 비교적 취약했던 청년, 여성, 고령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은 내수기반 확충에도 기여할 것임
 - 親기업환경 조성: 서비스업 관련 진입규제 완화, 경제특구 활성화, 공기업 민영화 등 시장을 키우고 경쟁을 활성화하는 親기업환경 조성
 - 성장잠재력 제고: 금융위기로 인해 취약해진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잠재성장률을 2%p 끌어올리기 위한 일관성 있는 정책을 수립·집행

< 집권 후반기 정책의 기본방향 >

	기본 방향	세부 과제
양적 지표	· 일자리 창출	· (단기) 청년 고용 인센티브 확대 · (단기) 여성을 위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 (중장기) 임금 피크제 확대 및 정년 연장 · (중장기) 고령친화적 비즈니스 육성 · (중장기) 비정규직 고용안정성 제고
질적 지표	· 親기업환경 조성	· (단기) 공공기관 선진화 목표의 100% 달성 · (중장기) 경쟁촉진형 규제완화 (서비스업 규제완화 등) · (중장기) 경제자유구역 특성화 및 FDI 활성화
	· 성장잠재력 제고	· (중장기) 바이오, 나노 등 新성장동력산업 육성 · (중장기) 부품소재산업의 고부가가치화 · (중장기) 인적 자본 투자 확대 · (중장기) 보육서비스 확대 등 일·가정 양립 지원 · (중장기) 남북 경협과 교류 재개 등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2) 세부 과제

○ (일자리 창출과 내수기반 확충) 청년, 여성, 고령자 등 상대적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함으로써 사회통합과 내수기반 확충에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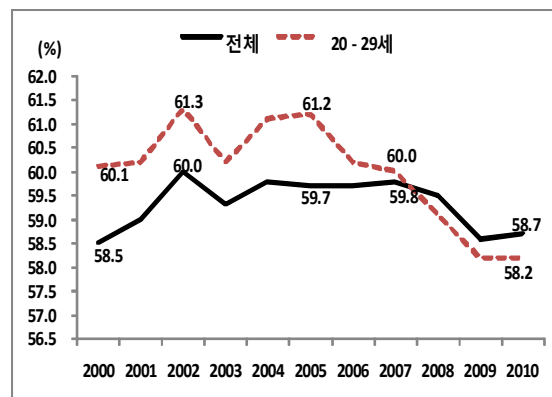
- 전체 취업자증가 속도는 빨라지고 있으나, 청년층은 3년 연속 취업자가 감소하고, 실업자를 포함하는 취업애로계층¹¹⁾의 숫자는 증가함에 따라 청년, 여성, 고령자 등 고용분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함
 - 2010년에는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 전체 취업자 수가 전년대비 32.3만 명 증가했지만, 청년층은 4.3만 명 감소했고, 청년실업률은 8%대의 높은 수준이며, 20대의 고용률은 2008년부터 전체 고용률 이하로 내려와 있음
 - 취업애로계층은 경기가 회복 국면에 있었던 2010년에도 계속해서 증가하여 192.1만 명에 달하고 있음
- 청년고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기업 현장에서의 직업훈련과 인턴을 확대¹²⁾하여 구인-구직의 미스매치를 최소화하는 등 제도적 노력이 필요
 - 여성의 출산 후 직장복귀를 지원하고,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통해 여성 고용률을 제고하는 등 저출산 대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함
 - 정년 연장,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고령친화적 일자리 창출 등 고령화시대를 준비하는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함

<주요 고용지표 추이>

(단위: 만 명, 전년동기대비 %)

구 분	2008	2009	2010
	연간	연간	연간
취업자 증감	14.5	-7.2	32.3
청년층	-11.9	-12.7	-4.3
공공부문	4.3	19.2	-7.6
민간부문	20.4	-26.4	40.2
실업률	3.2	3.6	3.7
청년실업률	7.2	8.1	8.0
실질실업률	6.1	7.3	7.6
취업애로계층	151.7	182.3	192.1

< 전체 및 20대 고용률 추이 >



자료 : 통계청

주 : 1) 청년층은 15세 이상 29세 이하, 2) 실질실업률은 취업애로계층을 반영한 실업률 (미국 U6기준)
2) 취업애로계층= 실업자 + 불완전 취업자 +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

11) 현대경제연구원, '취업애로계층의 급증과 해소방안', 2011.1.21

12) '히든챔피언'의 저자 헤르만 지문의 칼럼 'Trained by Germany'(manager magazin 2010.10)을 참조

- (親기업환경 조성) 서비스업 관련 진입규제 완화, 경제특구 활성화, 공기업 민영화 등 시장을 키우고 경쟁을 활성화하는 親기업환경 조성이 필요하며, 세계 각국은 법인세 인하 경쟁을 벌이는 등 親기업 전쟁¹³⁾ 중
- 경쟁촉진형 규제완화 : 경제적 자유도를 높이고,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서비스업 관련 진입규제를 완화하는 등 親기업환경 조성
 - 기업 구조조정의 촉진을 위한 규제 간소화, 금융 회계 법률 등 기업서비스업의 세계화를 지원하기 위한 진입규제 완화 등을 통해 경쟁을 촉진
 - 경제특구 활성화 : 우리 산업발전 단계와 경제자유구역 특성에 맞는 투자자를 유치하며, 국내기업에 대한 차별을 없애는 등의 새로운 접근이 필요
 - 경제자유구역에 유치된 외국인투자(FDI)는 전체의 3.3%에 불과하며, '업종별 차별화'를 유인할 수 있는 선택적 규제완화와 투자환경 개선¹⁴⁾이 필요
 -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국내기업을 차별하는 조세감면제도를 운영하는 선진국은 없으며¹⁵⁾, 내외국기업에게 동등한 현금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공기업 민영화 : 금융위기의 와중에서 공공기관의 노사관계 개선, 보수체계 합리화, 경영평가제도 개선 등 소프트웨어 측면에서의 성과도 있지만, 공기업 민영화와 출자회사 정리 등 하드웨어 측면의 성과는 미흡
 - 민영화 대상 24개 기관 중 2010년 말 현재 6개(25%) 기관이 매각 또는 상장되었으며, 출자회사 정리 대상 131개 기관 중 58개(44%)가 완료됨
 - 기존에 발표된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의 100% 목표 달성이 필요함

<경제특구 외국인투자의 전체 대비 비중>

	인천	부산 진해	광양	새만금	항해	대구 경북	총계
'04	-	0.40	0.50	-	-	-	0.89
'05	0.87	1.99	2.39	-	-	-	5.25
'06	0.46	0.38	0.18	-	-	-	1.02
'07	1.12	0.89	0.92	-	-	-	2.92
'08	1.09	0.95	0.02	-	-	-	2.06
'09	2.69	0.37	0.02	1.88	-	-	4.97
'10	9.44	5.73	0.09	9.74	-	-	25.0
총계	1.20	0.93	0.65	0.52	-	-	3.30

자료: 지식경제부

주: 2010년은 3월말 기준, 전체 투자액 대비 비중

<세계 각국의 법인세 인하 경쟁>

국가	일본	호주	뉴질랜드	영국	한국	캐나다
현재	41%	30%	30%	28%	24.2%	22.1%
향후	36%	29%	28%	24%	22%	15%
인하 시기	2011	2013	2011	2011	2012	2012

자료: Financial Times, Feb. 7, 2011.

13) The Economist, *The World in 2011*, 2010.12(한국경제신문사, 『2011 세계대전망』, p.21)

14) 투자유치 선진국들(영국, 아일랜드, 네덜란드, 싱가포르 등)은 세제감면 또는 특혜제도 등의 인센티브 운영 보다는 발달된 인프라, 우수한 노동력, 유리한 세제, 편리한 세관, 우수한 금융시스템 등 투자환경 자체가 유인으로 작용

15) 김준동 외(2009), p.194

- (성장잠재력 제고) 5% 내외의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부품소재산업 선진화, 인적 자본 확충, 보육서비스 확충, 지정학적 리스크 감소 등을 통해 잠재 성장률을 2%p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함
- **新성장동력산업 육성:** 소비자 선택권 강화, 진입장벽 완화,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서비스업을 선진화하고 바이오-나노 등 新산업 육성
 - 부품소재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산업 전반의 부가가치 향상을 지원
- **인적 자본 확충:** 수요자 니즈에 맞는 대학교육 시스템 구축, 세계100위권 대학 및 지역별 거점대학 육성, 산학연 연계를 통한 직업교육 내실화 등
 - 공공보육시설의 확충, 보육비용 지원 등을 통해 저출산 추세를 반전시키고, 고용시장의 유연성 확대 및 고령자 일자리 창출을 지원함
-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블루오션으로서의 북한시장 개발과 남북경협 재개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구성요소		정책 과제	세부 내용
요소 투입	노동	量的 투입	-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제고 - 퍼플잡(유연근무) 활성화 - 가족친화경영 지원 - 정년 연장, 임금피크제
		人的 자본	- 수요자 니즈에 맞는 대학교육 - 세계 100위권 대학 및 지역별 거점대학 육성 - 산학연 연계 내실화
	자본	- 투자환경 개선과 해외직접투자(FDI) 활성화	- 외국인 정주환경 개선 - 투자관련 규제의 획기적 완화 - 경제자유구역 리모델링
총요소 생산성	경제시스템 (산업구조, 연관효과등)	- 의료 관광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육성 - 부품소재산업의 수출산업화 - 금융의 경쟁력 제고와 산업지원기능 강화	- 소비자의 선택권 강화와 진입장벽 및 투자규제 완화 -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지원과 부품소재분야 히든챔피언 육성 - 금융전문인력 양성과 총개기능 복원, 외환시장 변동성 축소
	연구개발 (R&D 투자 및 효율성)	- 연구개발투자의 패러다임 전환과 효율성 제고	- 1등 전략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 도전-실패-재도전의 시스템화 - R&D 투자의 쓸림현상 해소
	사회적 자본 (신뢰, 통합 투명성 등)	- 신뢰, 공정 사회, 사회적 책임 등 사회적 자본의 확충 - 남북관계 개선 등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	- 양극화 현상 완화와 사회통합 - 정부-공공부문의 투명성 제고 - 모든 조직의 사회책임 강화 - 남북경협과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잠재성장률 2%p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2010.8.10

경제연구본부 김동열 수석연구위원(02-2072-6213)

별첨1. : 연도별 주요 경제지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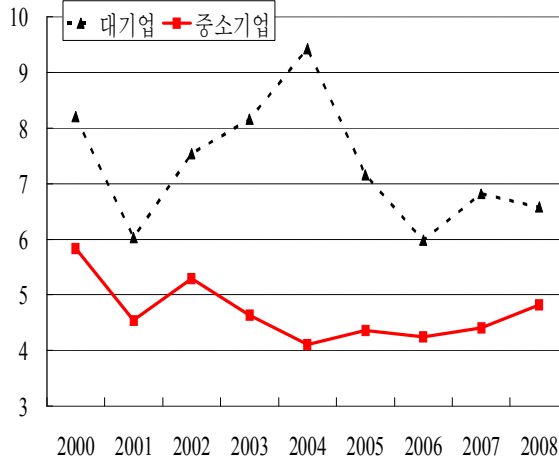
年度	1인당 GDP (달러)	실질GDP 증가율 (%)	취업자 증감 (만 명)	주가지수 (연평균)	국가채무 비율 (%)	국가 경쟁력 순위
1998	7,607	-5.7	-127.6	406	11.9	36위
1999	9,778	10.7	35.3	807	16.0	41위
2000	11,292	8.8	86.5	734	18.0	28위
2001	10,631	4.0	41.6	573	18.4	28위
2002	12,100	7.2	59.7	757	18.7	27위
2003	13,460	2.8	-3.0	680	18.6	32위
2004	15,082	4.6	41.8	833	21.6	31위
2005	17,531	4.0	29.9	1,074	24.6	27위
2006	19,722	5.2	29.5	1,352	28.7	32위
2007	21,695	5.1	28.2	1,712	31.1	29위
2008	19,296	2.3	14.5	1,529	30.7	31위
2009	17,175	0.2	-7.2	1,429	30.1	27위
2010	20,165	6.1	32.3	1,765	33.8	23위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IMD

- 주: 1) 국가채무비율은 국가채무규모의 GDP대비 비중
 2) 국가경쟁력순위는 IMD(국제경영개발원) 발표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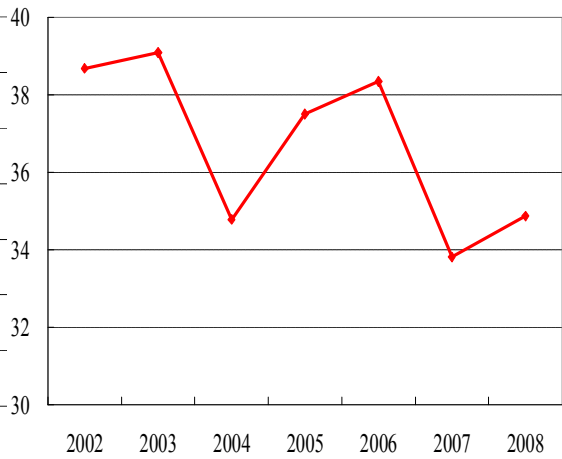
별첨2. : 중소기업 이익률 및 생산성 추이

<중소기업 1) 매출액 영업이익률>



자료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
주 : 1) 제조업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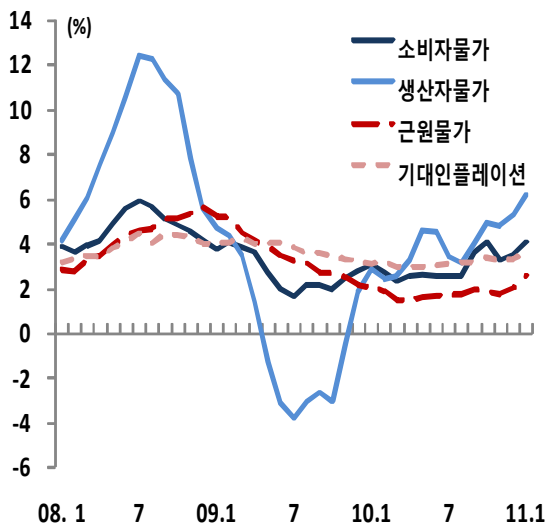
<중소기업 1) 노동생산성 추이>



자료 : 중소기업청
주 : 1) 제조업 기준이며, 대기업 생산성을 100으로 한 상대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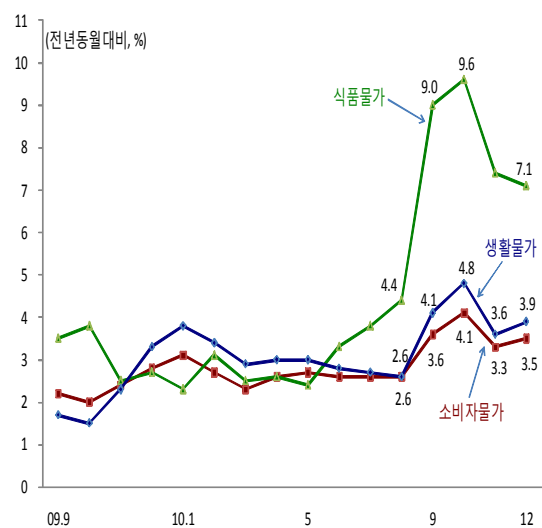
별첨3. : 최근 물가지수 추이

<소비자 및 근원물가 추이>



자료 : 통계청
주 : 근원물가는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물가지수

<식품 및 생활 물가지수 추이>



자료 : 통계청
주 : 1) 생활물가는 구입 빈도가 높고 지출비중이 높은 152개 품목으로 작성.
2) 식품물가는 식료품, 차, 음료, 주류, 외식 등의 품목으로 구성.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 국내외 성장률 추이

구분	2009년					2010					2011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E)
미국	-2.6	-4.9	-0.7	1.6	5.0	2.9	3.7	1.7	2.6	3.2	3.0
유로 지역	-4.1	-2.5	-0.1	0.4	0.2	1.8	0.4	1.0	0.4	-	1.5
일본	-6.3	-19.9	11.3	-1.2	5.7	4.3	6.8	3.0	4.5	-	1.6
중국	8.7	6.2	7.9	9.1	10.7	10.3	11.9	11.1	10.6	9.8	9.6
한국	0.2	-4.3	-2.2	1.0	6.0	6.1	8.1	7.2	4.4	4.8	4.3

주: 1) 2011년 전망치(E)는 IMF 2011년 1월 기준이고 한국은 현대경제연구원 전망치임
 2) 미국, 일본은 전기대비 연율, EU는 전기대비, 중국, 한국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임.

□ 국제 금융 지표

구분	2009년말	2010년		2011년			
		6월말	12월말	2월11일	2월17일	전주비	
해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3.83	3.89	3.30	3.64	3.58	-0.06%p
	엔/달러	92.93	88.43	81.19	83.33	83.63	0.30¥
	달러/유로	1.4413	1.2238	1.3350	1.3593	1.3567	-0.0026\$
	다우존스지수(p)	10,428	9,774	11,578	12,273	12,318	45p
	닛케이지수(p)	10,655	9,383	10,229	-	10,837	-
국내	국고채 3년물 금리(%)	4.41	3.86	3.38	3.94	3.96	0.02%p
	원/달러(원)	1,164.5	1,222.2	1,134.8	1,128.6	1,117.4	-11.2원
	코스피지수(p)	1,682.8	1,698.6	2,051.0	1,977.2	1,977.2	0p

□ 해외 원자재 가격 지표

구분	2009년말	2010년		2011년			
		6월말	12월말	2월11일	2월17일	전주비	
국제 유가	WTI	79.35	75.77	91.40	85.49	86.33	0.84\$
	Dubai	78.06	73.14	88.80	97.94	99.56	1.62\$
CRB선물지수	283.38	258.52	332.80	337.78	341.27	3.49p	

1) CRB지수는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곡물, 원유, 산업용원자재, 귀금속 등의 주요 21개 주요 상품선물 가격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지수로 원자재 가격의 국제기준으로 간주됨.